

‘김진속 복직 희망버스’, 부산 간다

19일, 350대 차량 드라이브스루 방식 진행 ... 군부독재 해고자들도 복직 촉구 대열 합류

한진중공업 최후의 해고자 김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김진속 조합원 복직을 위한 희망버스가 부산으로 간다.

김진속 희망버스 기획단은 12월 14일 청와대 앞에서 ‘해고 없는 세상, 김진속 채용과 복직을 바라는 리멤버 희망버스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획단은 ‘리멤버 희망버스’를 오는 12월 19일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 상황을 반영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버스에 김진속의 해고 기간 35년을 상징하는 350대의 차량이 참가할 예정이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각각 차를 타고 한진중공업 앞을 출발해 지정 장소까지 이동한다. 참가자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며 영상 편지와 엽서 보내기, 인증 샷 찍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리멤버 희망버스’는 유튜브 등으로 중계한다.

기획단은 희망버스와 함께 노동자, 시민들이 참가하는 ‘2020년 김진속 복직 2020년 선언’도 조직하고 있다. 신청자가 시작 닷새 만에 4천 명을 넘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3부로 나눠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많은 시민이 한목소리로 김진속 조합원의 복직과 채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1970년대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노조를 지켜낸 노동자들이 김진속 조합원의 복직을 위해 다시 뭉쳤다.



1부 기자회견은 1970년대부터 민주노조 운동을 개척한 노동자들이 ‘진속아 너의 복직이 우리의 복직이야’라는 제목으로 열었다.

청계피복노조와 원풍모방, 동일방직, YH무역, 반도상사, 컨트롤테이터, 한일도루코, 고려퍼혁, 전남제사노조에서 투쟁하다 해고당한 열네 명의 노동운동 선배들이 김진속의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진속의 복직 투쟁, 가슴이 저민다”

이 해고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한진중공업을 법정 관리하는 산업은행을 향해 35년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정년이 오기 전에 김진속 조합원을 복직시키라고 촉구했다.

박순희 원풍모방 해고자는 “박정희 독재에 이어 전두환, 노태우 군부독재 정권에서 해고당하고 깃밟힌 우리는 김진속 동지의 35년 복직 투쟁에 남달리 가슴이 저며온다. 암 투병 중인 김진속 동지의 투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

렇게 모였다”라며 끝까지 투쟁해 복직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2부 기자회견에 해고에 맞서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섰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운동은 가장 낮은 곳에서 연대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라며 “김진속 조합원은 낮은 곳을 향한 연대를 몸으로 실천하며 희망을 만들어 왔다.

금속노조가 희망을 이어받아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하겠다”라고 결의했다.

10년의 복직 투쟁 끝에 현장으로 돌아간 김정욱 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사무국장은 “2009년 해고자가 되어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을 때 대한문으로, 평택공장 굴뚝으로, 단식 농성장으로 찾아온 김진속 동지가 정말 고마웠다”라고 상기했다.

김정욱 사무국장은 “이제 김진속 동지가 정년이 되기 전에 복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라며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 19 핑계로 부당하게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김계월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부지부장이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 3부에서 희망버스 계획을 발표한 김호규 노조 위원장 등 대표단은 김제남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김진속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의 조속한 복직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조, 다시 전태일 3법 입법 투쟁 나선다

민주노총, 노조법·근기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 ... “핑계는 ILO 비준, 결과는 재벌 민원 처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이 결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국회는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 본회의에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악 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12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근기법 개악 규탄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 즉각 입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제출한 역대급 노조법 개악 안 중 최악의 조항은 빠졌지만, 자본의 요구대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구조를 유지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노조법, 근기법 개악에 대해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국내 법체계를 정비한다더니, ILO 권고와 국제 기준을 위배하는 법을 만들었다. 거기에 자본의 민원 법안은 왜 끼워 넣나”라고 규탄했다.



민주당은 노동자와 시민이 요구한 전태일 3법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벌의 요구는 받아들였다. 국회는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 근로제 정산 기간도 3개월로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며 사실상 과로사를 용인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21대 첫 국회는 고통받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무시했다.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ILO 핵심협약 비준, 노조법 2조 개정은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야단쳤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은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약속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왜 통과시키지 못하나”

라며 전태일 3법 즉각 입법을 촉구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규탄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근기법 11조 개정 요구는 노조할 권리를 위한 최

소한의 요구였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을 진짜 사용자로 인정하라는 노조법 2조 개정 요구는 교섭할 권리를 위한 당연한 요구였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민주당이 주무른 21대 첫 국회는 이러한 요구를 무참히 짓밟았다.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은 전열을 재정비해 전태일 3법 쟁취에 나서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와 노조 지부들도 이날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근기법 개악을 규탄하고 전태일 3법 제·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2월 14일부터 국회 앞에서 전태일 3법 입법 촉구 농성을 벌인다.

일하고 있지만 없는 사람들, 서울 제조업 노동자

도심제조업 노동정책 개선 방향 토론회 ... “서울시, 사업주단체에 제조업 지원사업 주도권 넘겨”

서울 도심에서 제조업 생산 노동을 하는 노동자 상당수가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공식 노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가 제조업 노동환경 개선에 뒷짐 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서울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가 12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연 ‘도심제조업 노동조건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서울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는 금속노조 주얼리분회와 민주일반연맹 제화지부, 화학섬유식품노조 서울봉제인지회 등이 만들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원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전국 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서울지역 노동자들이 비공식 노동 상태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분석했다. ‘비공식 노동’은 무등록·특수고용 노동자, 무급 가족 종사자처럼 사업장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회제도와 노동관계법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일자리를 의미한다.

2018년 전국사업체 조사에서 서울 제조업체 노동자는 26만 7천 명이었다. 전국사업체 조사는 사업주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한다. 같은 해 별인 지역별 고용조사 가운데 서울 제조업 노동자는 42만 4천 명이다. 지역별 고용 조사는 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다.

제조업 노동자 수는 지역별 고용조사와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가 달랐다. 전국사업체 제조업 노동자 수는 지역별 고용조사 제조업 노동자 수 대비

전국 평균 90.9%였다. 서울은 이 비율이 62.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주환 연구원에 따르면 노동자 본인은 취업자에 속한다고 판단하지만, 사측이 사회보험을 신고하지 않는 등 미등록한 경우가 많아 두 결과 수치에 차이가 생긴다.

이주환 연구원은 “다른 광역시도보다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만 따져도 서울지역 제조업 노동자들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며 “서울시는 창업이나 새로운 고용 창출에 열을 올리고, 기존 일자리 개선은 뒷전”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서울 ‘비공식 노동’, 다른 광역지자체 보다 많아

이주환 연구원은 “주얼리센터, 제화아카데미 등 서울시 지원으로 보석가공이나 봉제·제화 기술을 익혀 도심 제조업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열악한 노동조건 탓에 쉽게 이탈한다”라고 지적했다. 기존 일자리 질을 높이지 않으면 서울시의 신규 일자리 확대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결론이다.

도심제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는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 관련 노조와 연구자들은 제조업 지원사업에 사업주협회 등 사업주단체만 참여시키는 서울시 정책을 시급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제조업 지원사업을 사업주단체가 주도하니 지자체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노동자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노동조

합·공제회 같은 노동자단체가 서울시 제조업 정책사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도심제조노동조합연석회의 등은 서울시가 ‘비공식 노동 해소’를 노동정책과 제조업 발전사업의 기본방향으로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이주환 연구원은 이 밖에 ▲노사정 협의로 단가·노임 표준화 ▲노동 이력 증빙 제도 도입 ▲집적지에 맞춤형 쉼터·상담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 도심제조업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강력한 행정 집행 요구가 쏟아졌다. 김정봉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지회 주얼리분회장은 “서울시는 주얼리 산업 육성 명목으로 사업주들에게 여러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용자 불법행위에 따른 노동자 피해에 눈을 감는다”라고 비판했다.

김정봉 노조 주얼리분회장은 “사용자들이 세금 회피 등 목적으로 종로의 대다수 주얼리 노동자를 ‘있지만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폭로했다. 김 분회장은 “최소한의 사회보호장치이자 당연한 노동자 권리인 사회보험 가입이 사용자 거부와 행정당국 방치 탓에 가로막혀 있다. 사용자가 범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와 명령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사정 협의체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정봉 분회장은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서울형 고용보험’ 확대 등 주얼리 산업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 사항을 서울시와 안정적으로 논의하고 싶다”라고 덧붙였다.